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해설

1. ② 2. ④ 3. ③ 4. ② 5. ③ 6. ② 7. ① 8. ④ 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④ 16. ① 17. ① 18. ③ 19. ② 20. ①

1. 일반법과 특별법,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은 특별법, ㉡은 일반법이며, ㉢은 절차법, ㉣은 실체법이다.

ㄱ. 보험업법과 비교하여 상법은 일반법이며, 보험업법은 특별법이다.

ㄴ. 민사 소송법은 모든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법임과 동시에 절차법이다.

오답피하기

ㄷ.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ㄹ. 실체법, 절차법을 법이념과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다. 하나의 실체법 안에 정의의 실현, 합목적성의 실현,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그림과 관련된 국제법은 집단 학살, 즉 제노사이드(Genocide) 금지원칙이다. 제노사이드 금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란,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는 국제 조약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피하기

④ 조약은 체결이나 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그렇지 않다.

3.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가 위헌인 근거 파악

정답 해설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국가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때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여성 및 제대 군인이 아닌 남성을 지나치게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직으로의 진출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가산점 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답피하기

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ㄴ.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란 여성 합격자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점수가 다소 미달되더라도 여성을 추가로 뽑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4. 소년범의 취급에 대한 이해

만 14세인 아이의 과실 치상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만 14세 아이는 형사상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 20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통해 평생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오답피하기

ㄴ. 소년원 송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ㄷ. 보호 관찰이나 사회 봉사 및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다.

5. 법의 실효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의 파악

정답 해설 : 지문에서 경찰청은 사문화된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조항은 삭제하고, 국민의 여가로 자리 잡은 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밀 춤교습 및 장소 제공’ 등의 조항은 삭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 범칙금도 국민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 내용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법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경범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주장은 나와 있으나, 다양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ㄴ. 경범죄의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6.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 특히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 기관이 배상하는 제도와 관련된다. 그리고 (나)는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와 관련된다.

① 행정상 손해 배상의 경우, 근대 국가 초기에는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국가 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였으나 점차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③ 행정상 손실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희생으로 공공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분산, 전가시켜야 한다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사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④ 행정상 손실 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은 단순히 침해된 재산의 등가 교환 가치를 넘어 재산권의 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행정상 손해 배상과 행정상 손실 보상은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행정상 손해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나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 기관이 배상하는 것이다. 지문의 (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와 관련을 맺는 행정상 손해 배상이 아니다.

7. 채권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출연 계약, 납품 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채권이다.

ㄱ.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자는 불법 행위를 초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의 청구할 수 있다.

ㄴ.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오답피하기

ㄷ. 채권은 반사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ㄹ. 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8. 상속분의 계산

정답 해설 :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된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60%가 된다. 그러나 그림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는 절반만 상속받게 되어, 오히려 배우자가 현행보다 더 적게 상속을 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아내 1.5, 혼인한 딸 1, 미성년 아들 1이므로, 배우자의 몫은 1.5/3.5가 된다.

② 아내 1.5, 부 1, 모 1이므로, 배우자의 몫은 1.5/3.5가 된다.

③ 아내 1.5, 미성년 딸 1, 미성년 아들 1이므로, 배우자의 몫은 1.5/3.5가 된다.

⑤ 아내 1.5, 혼인한 딸 1, 혼인한 아들 1이므로, 배우자의 몫은 1.5/3.5가 된다.

9. 민사 재판을 위한 소장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원고는 김○○이고, 피고는 이△△이므로, 갑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ㄴ, ㄷ. 이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은 민사 재판이다.

오답피하기

ㄴ. 소장의 내용에 따를 때, 갑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다.

10. 행정 소송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재판은 원칙적으로 삼심제가 적용된다. 지문의 행정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서울 행정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다.
- ②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슈퍼 주인이며, 처분청은 피고이다.
- ③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 확인을 요하는 항고 소송이다.
- ⑤ 법원의 판결은 사법 해석으로, 유권 해석에 해당한다.

11. 형벌의 목적을 보는 두 관점의 비교

정답 해설 : 형벌의 목적을 갑은 범죄 예방, 을은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을은 형벌을 사회에 유익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형벌은 그 자체로서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징은 을의 관점이다.
- ② 국가가 해체될 경우, 사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크지 않다.
- ③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자는 갑이다.
- ⑤ 갑, 을의 관점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갑이 전체주의, 을이 개인주의적 관점이 강하다.

12.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일반인과 학생 모두 ‘법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이 옳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으면서도,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 의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답피하기

- ① 일반인이 학생에 비해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 ‘법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일반인의 준법 의식이 높다.

② 학생이 일반인에 비해 ‘요즘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학생이 법에 대해 불만이 더 크다.

④ 학생이 일반인에 비해 ‘만약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법에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높다. 학생이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라는 의식을 더 갖고 있다.

⑤ 일반인이 학생에 비해 ‘만약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법에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일반인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법을 더 유용하게 생각한다.

13.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헌법 재판소는 명예 훼손에 대해 다액의 배상금을 물게 하거나 그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양심의 자유란 개인이 형성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양심 및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등급 분류 보류제는 영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사상 등을 표현하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지문의 요지이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란 좁게는 언어와 인쇄 매체, 넓게는 영화나 비디오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14.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

정답 해설 : ㄷ. 중도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갑과 을 어느 누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을은 계약금의 배가 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ㄴ.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잔금 지급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한정 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므로, 구두 계약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다.

15. 환경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환경 피해의 특성상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법원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된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환경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사법적 구제 수단이다.

③, ⑤ 사전적 구제 제도이다.

16.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의 파악

정답 해설 : 지문의 내용 취지는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만 20세에 이르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행해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본인이 직접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는 미성년자의 법률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17.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ㄱ.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며,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공판이 시작된다.

ㄴ. 기소 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공판 전에 이루어진다.

오답피하기

ㄷ. 보석이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키는 제도로, 형의 확정 전에 이루어진다.

ㄹ. 집행 유예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 또한 형의 확정 전에 이루어진다.

18.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판단

정답 해설 : 텔레비전 내부의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묻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다만, 민법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한해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법은 특별법, 민법은 일반법이다. 따라서 지문의 상황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법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권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 ② A 할인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긴급 피난이란,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옆에 있는 가게를 부순 행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ㄴ. 책임성 조각 사유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ㄴ.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20.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과 관련한 지문의 글은 형사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와 같은 형사 재판정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을과 관련한 지문의 글은 민사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와 같은 민사 재판정에서 다루어진다.

ㄱ.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ㄴ. 민사 재판은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 포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한다.

오답피하기

ㄴ. 갑은 (가)재판에서 피고인이다.

ㄴ. 지방 법원 단독부가 1심인 경우 항소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가 된다.